EU 확대정책의 불확실성 증대

□ 중·동구 국가들, EU 가입협상 꾸준히 진행 중

- 지난 6월 초 브뤼셀에서 열린 실무협상에서 중·동구 10개국의 EU 가입을 위한 논의에 진전이 있었음. 이 결과 EU의 법·규범 수용이 필요한 31개 협상대상 분야 중 리투아니아는 28개 분야의 협상을 종결시켜 전체협상 완료를 눈앞에 두게 되었음.

<표> 국가별 협상종결 분야 현황(2002. 6. 24 현재)

대상국가	종결분야 수
리투아니아	28
라트비아	27
슬로베니아	27
에스토니아	26
슬로바키아	26
체코	25
폴란드	25
헝가리	24
불가리아	20
루마니아	10

자료: EIU, *Viewswire*, Jun 2002.

- 그 동안 헝가리, 체코 등 경쟁국들에 비해 협상 진전이 뒤쳐졌던 폴란드도 어업, 운송분야의 협상을 종결시켜 총 25개 분야의 협상을 마무리했음.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헝가리와 체코는 추가 협상완료 분야가 없었음. 한편, 조세, 재화 및 노동력의 자유이동 분야 협상을 마무리한 불가리아는 총 20개 분야의 협상을 종결시킴으로써, 10개 분야 타결에 그치고 있는 경쟁국 루마니아를 크게 앞지르게 되었음.

- 2004년까지 1차 EU 확대의 완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Gunter

Verheugen EU 확대 추진위원장은 금년 말까지 대상국들의 분야별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임. 한편, 불가리아도 2003년까지는 협상 완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Verheugen 위원장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04년의 1차 가입에서 배제될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음.

□ EU 확대계획의 불확실성 증가

- 최근 Verheugen 위원장은 200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EU 확대정책이 몇 가지 장애에 봉착함으로써 확대정책 자체가 와해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음.

- 첫 번째 요인은 EU의 재정보조금 지급에 대한 현 회원국과 가입추진 국가들간의 이견이며, 두 번째는 최근 EU지역에 점차 거세지고 있는 극우파 정치세력의 부상임. 마지막으로 아일랜드가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신규회원국 가입 허용에 합의했던 2000년 니스협약을 거부한 것임.

□ EU 재정보조금 지급정책에 대한 이견

- 농업 및 빈곤계층에 대한 EU의 재정보조금 지원에 대해 스페인, 그리스 등 농업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신규 회원국에 대한 재정보조금 지급에 반발하여 왔음. 이에 대해 EU 집행부는 신규회원국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의 도출을 유도하고 있음. 즉, 중·동구 신규회원국들은 가입 첫해에 현 회원국 수취금액의 25%만 수취하고, 매년 수취금액을 늘려 10년 후 모든 대상국들에게 공평한 혜택을 보장하는 것임.

- 그러나 중·동구 국가들은 자국 농업이 불리한 경쟁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농촌인구 비중이 높은 폴란드의 반발이 특히 거센 실정임. 보조금 문제가 불리하게 결정될 경우 중·동구 국가들도 국내에서 EU 가입반대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임.

- 한편, EU 회원국들은 재정지원의 핵심사안인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주요사항 협의를 당초 6월에서 주요 기부국인 독일의 총선이 끝나는 9월 이후로 연기하였음.

□ EU 지역에서 극우파 급부상 중

- 지난 4월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파인 장 마리 르펜이 2위로 결선투표에 올라 세계를 놀라게 한 데 이어, 5월 네덜란드에서는 총선 직전 피살된 극우파 핌 포튜인이 이끌던 리스트당이 제2당으로 부상하였음. 그밖에 오스트리아의 자유당을 이끄는 외르크 하이더, 이탈리아의 극우 북부동맹을 이끄는 움베르토 보시, 덴마크 인민당의 피아 키에르스고르 등 극우파들이 여러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최근 EU 지역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극우파 바람은 EU 확대정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는 공통적으로 인종차별적 성향과 이민을 반대하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서유럽 극우파들이 가난한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지원과 이 지역 노동력의 자유이동을 전제로 하는 EU 확대에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극우파 바람이 거세질수록 중도성향의 집권세력들은 적극적으로 EU 확대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임.

□ 아일랜드의 EU 확대정책에 대한 결정

- 모든 EU 협정은 모든 회원국들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발효되는데, 지난해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통해 니스협약에 대한 반대결정을 내렸음. 금년 말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인데, 이번에도 국민투표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EU 확대정책은 심각한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아일랜드에서 다시 한 번 정치적 부결 결정이 나타난다면, CAP에 대한 이해당사국들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극우파 득세와 맞물려 EU 확대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됨.

책임연구원 고재호(☎3779-6663)
E-mail : kohjh@koreaexim.go.kr